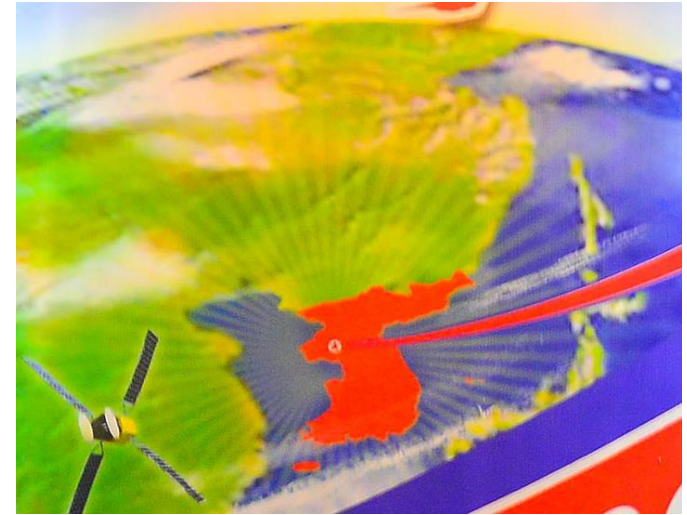


2024년 참세상 주례토론회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와 한반도 문제

김정은 2기 북한의 선택과 노선



6월 5일 (수)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

발표자 소개

- 서울대 국사학과, 동 대학원
- 전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전문기자, 월간 <민족21>편집주간
- 전 국민대, 북한대학원대학교, 한양대 사학과 겸임교수
- 전 통일부 남북회담 자문위원, 2007년 국가정상선언 이행 민간자문위원,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 위원
- 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 <저서 및 공저>
- [인물로 본 북한현대사], [변화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 [CEO of DPRK 김정일], [남북현대사의 쟁점과 시각], [북녘의 사회와 생활] [북한사회 깊이 읽기] [박병엽증언록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생], [평양의 일상-사진으로 북녘 생활을 엿보다], [장성택사건 숨겨진 이야기], [키워드 본 김정은시대 북한], [안중근가 사람들-영웅의 숨겨진 가족이야기], [암살], [새로 쓴 한국현대사] [평화의 시선으로 분단을 보다], [한국현대사]1-2, [최능진 평전], [북한국보유적기행],[북한박물관기행],[고려왕릉기행] 등

1. 북한이 내놓은 두 개의 상충된 메시지

-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2023년 12월 26일-30일)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 시정연설(1월 15일)
- 조선노동당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1월 23-24일)

1) 충돌과 확산, 유사시 전쟁, 비평화적 통일의 길(점령, 평정, 수복) 언급

2) 인민군 부대 동원해 '전국의 동시적, 균형적, 비약적 발전' 을 추구하는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결정

 2개의 메시지를 보완적으로 분석 필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 시정연설에서 제시된 정책과 방향(2024.1.15)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 발전노선과 시정방침

부유하고 문명한 시대

부흥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당면과제

국가경제의 상승추이를 계속 고조시켜 경제전반을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는 것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정비보강사업 완료

국력 제고

국익 수호

국위 선양

정치·국방 선차, 경제·문화 동시발전

인민경제의 균형성장

지역간 균형발전

대남·대외관계

- *인민정권기관 역할, 사업체계와 질서 강화
- *내각 결정과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엄격한 규율과 질서 확립
- *경제지도와 관리의 통일성 보장
- *국가경제사업에서 불균형과 무질서 해소
- *행정경제사업체계와 질서 확립
- *단위특수화, 본위주의와 투쟁
- *자위적 국방력 최상최대로, 핵전쟁억제력 제고**
- *전민항전으로 혁명적대사변 맞이하는 것이 전략적 구상
- *유사시 전시체제 이행 철저 대책
- *선제공격수단 아닌 정당방위력

- *사회주의성격 고수, 원칙적인 통제와 관리 통해 국가의 원활한 기능 담보.**
-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은 인민 복리 증진.
- *농업생산성과 지속적 유지(애국적 열의와 집단주의정신/과학농사/관계체계 완비/밀재배 확대/밀가공기지 건설/농촌경리의 기계화, 간석지 건설)
- *기계공업부문 특별 역할**
- *건설부문 확대(살림집 건설 결속/도소재지 개변/동서해 대운하 등 준비)
- *건재공업, 철도부문, 정보산업부문, 국토환경보호부문, 도시경영부문 언급
- *국가과학기술발전전략 채택

- *지방의 세기적 낙후성 심각한 문제
-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문제로 수도와 지방 차이/ 지역간불균형 극복 지적
- *김화군 지방공업공장 수준으로 지방공업 건설
- *국가적 지원대책 확립 강조. 당에서 책임지고 자금, 노력, 자재 보장/ 조직지도부에 지방공업건설지도과 신설
-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 *지방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 *지방의 교육수준과 환경 개선
- *시, 군들에 병원 건설
- *보건보험기금에 의한 의료보장제 전국 확대

- *물리적 충돌에 의한 확전으로 전쟁 발발 위험단계**
- *80년간의 북남관계사에 종지부
- *2개 국가 인정 대남정책 법화/ 적대적 교전국 관계
-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
- *헌법 일부 개정. 영토 규정 신설/ 전쟁 발발 시 대한민국을 완전 점령 평정 수복 편입 문제 반영
- *반제자주, 정의와 평화 수호, 진보세력과의 친선과 단결 /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에 적극 투쟁

1-1) 전쟁 억지 : '자위적 국방력' 강화

-> "핵무력의 전쟁억제라는 본령 이외의 제2의 사명" 재확인

"전쟁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은 완화되기는커녕 날로 악화일로를 기록하였으며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위태한 전쟁 발발위험지역으로 되었습니다." => "물리적충돌에 의한 확전으로 전쟁이 발발할 위험은 현저히 높아지고 위험 단계" (1월 15일 시정연설)

◇ "전쟁이라는 선택을 할 그 어떤 리유도 없으며 따라서 일방적으로 결행할 의도도 없지만 일단 전쟁이 우리앞의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는데 노력하지 않을 것"

◇ "어떤 형태의 도발적행위도 압도적인 대응으로 철저히, 무자비하게 제압분쇄할수 있게 확신성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나가야 합니다."

◇ "전민항전으로 나라도 지키고 혁명적대사변도 맞이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구상입니다."

◇ "대결광증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통일의 길**을 함께 갈수 없다"

◇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령역에 편입"

2-2) 지방발전 20×10 정책 발표

◇ 지방발전 20×10(이십승 십) 정책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으로,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향후 10년 내에 전국 모든 시, 군에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함으로써 전국 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한단계 비약시키겠다는 것이 중요 내용

[의미] “《지방발전 20×10 정책》은 지난 시기 **말로만 해오던 이상과 선전적인 것이 아니라** 실지 계획성을 띤 실행담보를 바탕으로 결단한 하나의 거대한 변혁적로선이고 지방인민들의 초보적인 숙망을 풀어주며 우리 사람들의 인식령역에서 근본적인 개편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거창한 혁명인 동시에 세기적인 숙원사업”

[필요성] “농촌의 후진성과 중국적으로 결별하는데서 전례없이 방대하고 통이 큰 전선으로 되는 농촌살림집건설이 전국적 판도에서 대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속에 전국 지방공업의 새로운 발전국면을 여는 또 하나의 거창한 전선을 형성하고 이 두 혁명단계를 병행하여 수행할것을 결심한것은 쉽게 용단을 내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방인민들의 숙망이자 우리 당의 숙원이고 지방공업의 발전이자 지방의 발전이며 지방의 발전이자 국가의 전면적부흥장성으로 되기에 우리는 새로운 투쟁을 주저없이 단행해나갈 중대결심을 내리게 된것입니다.” (당 정치국 확대회의)

- 당 조직지도부에 지방공업건설지도과 신설
- '지방발전20×10 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 설치 (위원장 : 조용원 조직비서)
- 당 정치국 성원들이 시,군을 하나씩 맡아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강하게 추진
- 도당 책임비서들은 올해 건설되는 2개 시,군의 지방공업공장들이 실제 가동될 수 있도록 원료와 기능공 양성까지 책임적으로 완수한 뒤 연말 전원회의에 보고
- **지방 건설에 인민군부대 동원 (지방 살림집 건설+지방 공장 건설)**

◇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령 《지방공업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 결정관철투쟁에 인민군부대들을 동원할데 대하여》를 박정천 당 비서가 발표하고 이에 김정은 총비서가 명령에 친필서명한 뒤 총참모장에게 직접 전달 -> '지방발전 20X10 비상설 국방성지휘조' 조직 -> 지역별로 담당 제124연대 조직

2. 분석과 논의의 출발점 → 김정일시대 북한의 선택 : 집권2기 노선과 정책의 재정립

쟁점1 : 내부 논쟁

- 북한식 개혁개방 노선 : 내부 시스템 개혁과 미국과의 협상
- 사회주의 전면 발전 노선 정립: 3대혁명 강화와 새시대 농촌혁명강령 등

쟁점2 : 전환 계기

- 하노이회담 결렬 -> 장기전, 정면돌파전 / MZ세대 부상
- 러-우크라이나전쟁 -> 신냉전과 다극화 / 개혁개방노선의 수정

쟁점3 : 구상과 현실

- '15년 구상'과 지방발전 20X10 정책 제시
- 자원과 경제개방, 정치개혁(특수주의 해체, 반부정부패, 선거 등)은?

쟁점4 : 핵보유 이후

- 핵독트린과 군사교리 변화 / 국가방위력 강화 -> 전쟁을 결심했나?
- 평화적 이행과 비평화적 이행 / 협상 가능성과 국지전 가능성은?

쟁점5: 두 국가론

- 체제의 차이와 적대적 현실 인정
- 체제경쟁 선언 -> 연방제통일론 포기 또는 유예?

3. 북한은 무엇을 꿈꾸는가? : 2021년 1월 8차당대회 이후 -새로운 시대 규정과 '15년 구상'

1) 사회주의 건설론

(1) 사회주의건설 전면발전기 = 우리국가제일주의가 시대정신

(2) 목표 시한 : 2036년 조선노동당 11차 당대회 전까지

- "우리 당은 앞으로의 5년을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에서 획기적 발전을 가져오는 효과적인 5년, 세월을 앞당겨 강산을 또 한번 크게 변모시키는 대변혁의 5년으로 되게 하려고 작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의 거창한 투쟁을 연속적으로 전개하여 **앞으로 15년 안팎에** 전체 인민이 행복을 누리는 융성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고자 합니다." (2021년 4월 29일 청년동맹 제10차대회에 보낸 서한)

2) 조국통일론

(1) 두 개의 국가 공식 인정 : '적대적 두 개의 국가'로 고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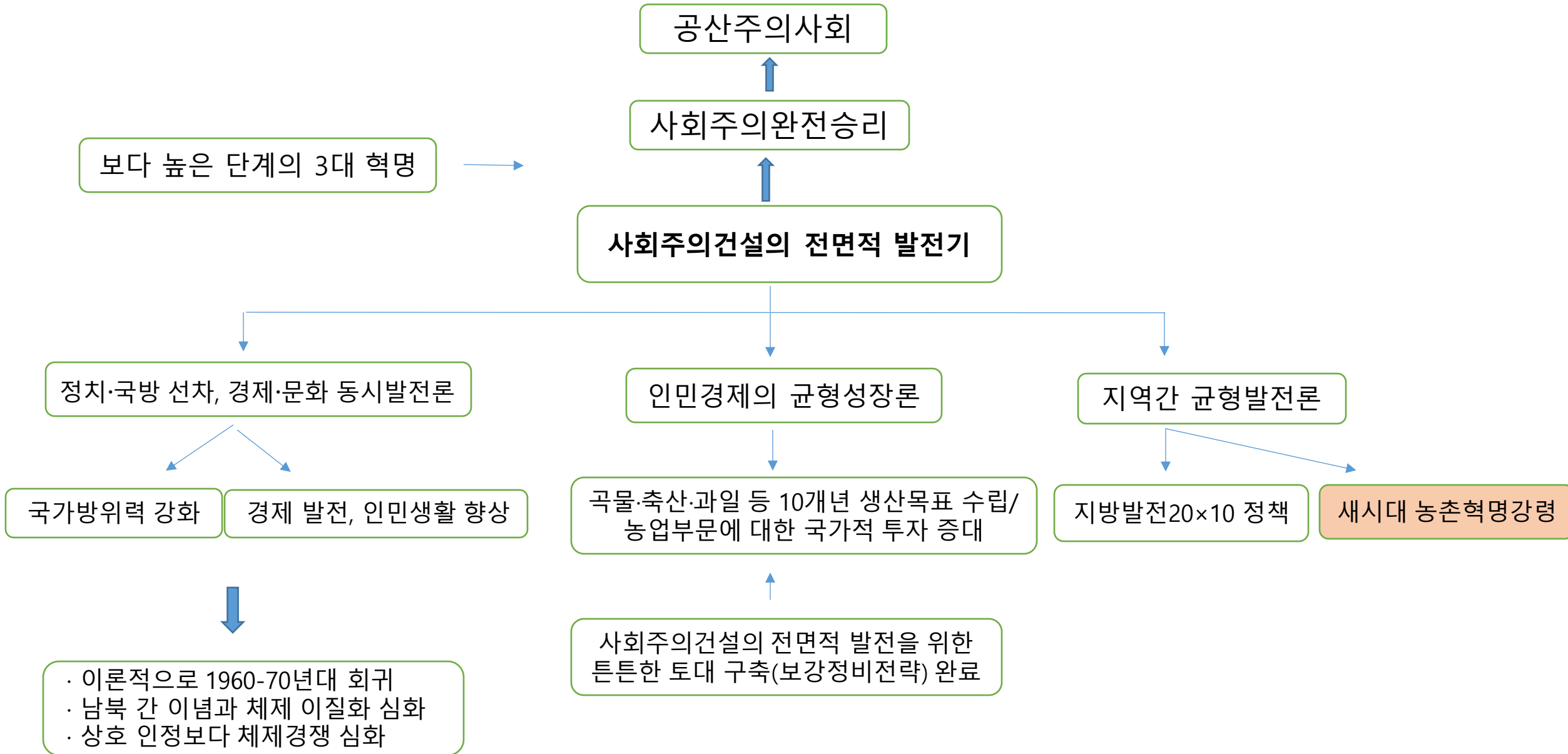
(2) '대남 통일전선론', '연방연합제' 폐기

-김여정 부부장,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래일은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는 파렴치한이가 다름아닌 윤석열 그 《위인》이다.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다.**"

(2022.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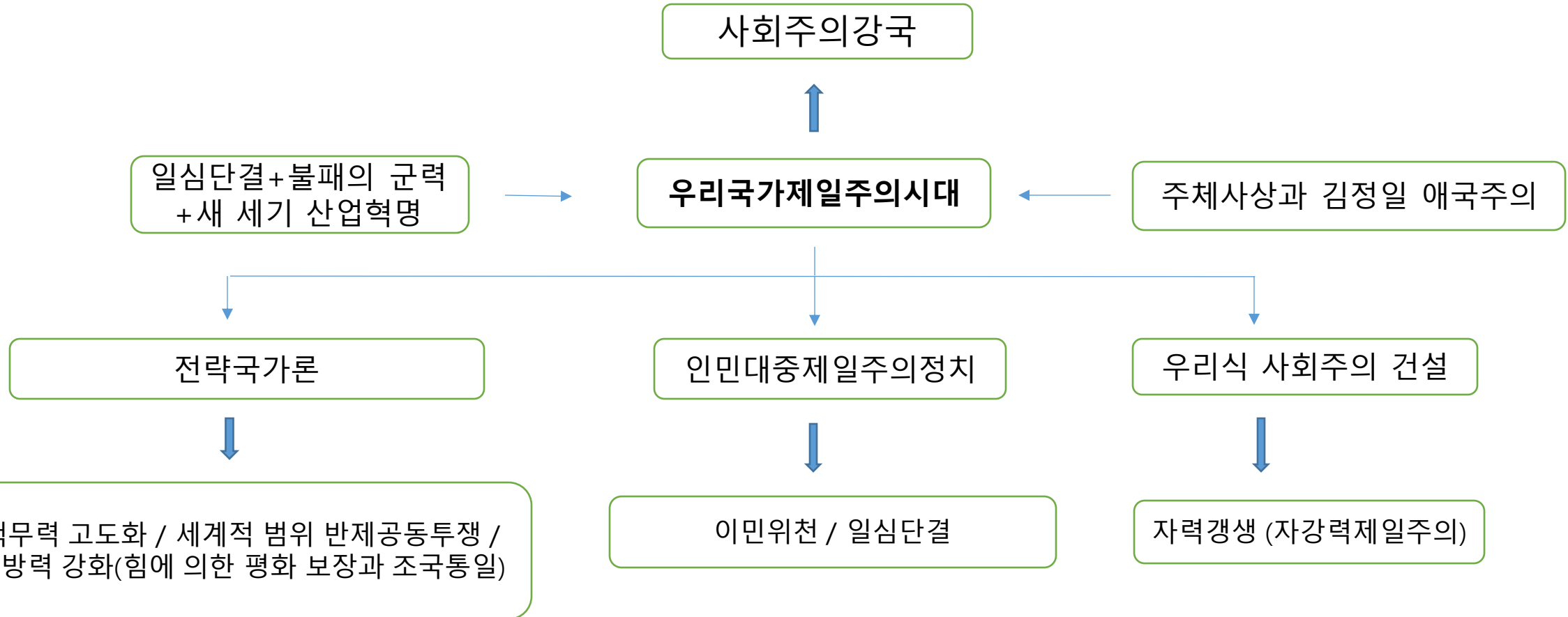
3-1) 사회주의 발전단계론 재등장

우리식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에 관한 사상으로 선전



시대 성격규정 변화 -우리국가제일주의시대

우리국가제일주의, 우리국가제일주의시대 - “우리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갈데 대한 사상 ” 으로 선전



3-2) 대남전략의 근본적 전환 공식화

◇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8차당대회에서 한 김정은 총비서의 발언

“지금 우리 민족은 북남관계의 심각한 교착상태를 수습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대결의 악순환과 전쟁의 위험 속에 계속 분렬의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이 엄중한 상황을 더이상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하며 **파국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한다”

⇒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은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근본 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입장과 자세 △적대행위 중지 △북남 선언들의 성실 이행 등 3가지 기준 제시)

◇ 3년 후 “대한민국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통일의 길을 함께 갈수 없다**”고 선언.

- ①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족속”이란 수사(修辭)의 의미는? -> 두 민족론?
- ② 왜 통일에 대한 ‘전략적 구상’까지 일방적으로 선언했나? / 2017년 정세와 질적인 변화가 있었나? / 좌편향?
- ③ 20년 전의 북한 내부 범민련 해소논쟁 / 2세대(2.5세대)의 완전 퇴진 / 북 신세대 사고방식의 시사점
- ④ 1월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한 김정은 총비서의 발언이 갖는 의미 -> 남북관계는 실익도 없고 소모적
“지방공업의 전면적발전이라는 또 하나의 전선, 또 하나의 거창한 혁명단계를 병행하여 엄격히 수행한다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하자는 것이다.(...)할 수 있는가? 반드시 할 수 있으며 또 할 것이다. 해야만 한다”

4. 대남전략 변화 내용과 의미

내용) “80년간의 북남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공화국의 대남정책을 새롭게 법화”

->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가 아닌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관계”

의미) 1)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개 나라라는 국제적 현실 인정

2) 통일의 평화적 이행 노선(연방제 방식의 통일 방안) 폐기(유예) -> 체제경쟁 통한 통일 환경 조성

3) 힘의 의한 평화, 힘에 의한 민족문제 해결

4) 전략적 변화인지 전술적 언술인지 분석 필요

4-1) 대남 사업을 '대적(對敵)사업'으로 전환

-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밍더라" (김여정, 2020.6.4 담화)

- 2020년 6월 8일 대남 사업부서 사업총화 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 동지는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짓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 사업계획들을 심의하고 우선 먼저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완전히 차단해버릴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공간을 완전 격폐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의 행동"

-6월 10일 남측에서 대북 전단 살포하자 6월 16일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 6월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남군사행동계획 발표(23일 보류 발표)

->장금철 통전부장 담화(2020.6.12)

"남조선 당국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 "자기가 한 말과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고 그것을 결행할 힘이 없으며 무맥 무능하였기 때문에 북남관계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큰 일이나 칠 것처럼 자주 흰소리를 치지만 실천은 한 걸음도 내짚지 못하는 상대와 정말로 더 이상은 마주서고싶지 않다",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

- 2020년 9월 24일 김여정 담화 :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촉구 유엔연설에 대해)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 ->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 2024년 1월 3일 김여정 담화

2024년 1월 3일 김여정 담화에 나타난 북한의 인식

- “지금 조선반도의 안보형세가 당장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만큼 매우 위태롭게 되고 안보불안이 대한민국의 일상사가 된것은 전적으로 윤석열대통령의 《공로》이다. 야유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진심으로부터 하는 말이다.”
- “안보를 통채로 말아먹은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그쪽 세상에서는 장차 더해질것이 뻔하지만 우리에게서는 자위적이며 당위적인 불가항력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단단히 《공헌》한 《특등공신》으로 《찬양》받게 되어있다. 입에는 꿀을 바르고 속에는 칼을 품은 흉교한 인간보다 상대에 대한 적의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우직하고 미련한 자를 대상하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은가.”
- “북정권과 군대는 《소멸해야 할 주적》으로 규정하고 떠들어주었기에 우리는 진짜 적이 누구인지 명백히 하고 대적관을 서리찬 총창처럼 더더욱 베풀수 있게 되었으며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넘볼처럼 떠들어주었기에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통일》과 같은 환상에 우리 사람들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각성시킬수 있었으며 제 먼저 9.19 북남군사분야합의의 조항을 만지작거리주었기에 휴지장따위에 수년간이나 구속당하던 우리 군대의 군사활동에 다시 날개가 달리게 되었다.”
- “문재인. 참 영특하고 교활한 사람이였다. 어리숙한 체하고 우리에게 바투 달라붙어 평화보따리를 내밀어 우리의 손을 얹어매여놓고는 돌아앉아 제가 챙길것은 다 챙기면서도 우리가 미국과 그 전쟁사환군들을 억제하기 위한 전망적인 군사력을 키우는데 이러저러한 제약을 조성한 것은 문재인이다. 우리와 마주앉아 특유의 어눌한 어투로 《한피줄》이요,《평화》요,《공동번영》이요 하면서 살점이라도 베여줄듯 간을 녹여내는 그 솜씨가 여간이 아니였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다루기 까다로운 상대였고 진짜 안보를 챙길줄 아는 사람이였다...문재인의 그 걸발린 《평화의지》에 발목이 잡혀 우리가 전력강화를 위해 해야 할 일도 못하고 적지 않은 시간을 허비한것은 큰 손실이였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리된 규정 / 9.19군사합의 사문화 명분 / 주적론과 대적관 정당화

4-2) “둘이면서 하나”인 남북관계에서 두 개 나라의 적대적 관계로 전환

- 한반도의 안보적 불안정성

“대한민국이라는 최대의 적국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 병존하고있는 특수한 환경과 미국놈들의 주도하에 군사적인장격화로 지역정세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현실을 랭철하게 고찰해보면 물리적충돌에 의한 확전으로 전쟁이 발발할 위험은 현저히 높아지고 위험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시정연설)

- 정부(정권)가 아닌 '대한민국' 을 대상 -> 통일전선의 대상 아니다 ->->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기구 폐지

“북남관계사가 주는 최종결론은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을 꿈꾸면서 우리 공화국과의 전면대결을 국책으로 하고있고 나날이 패악해지고 오만무례해지는 대결광증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통일의 길을 함께 갈수 없다는 것.”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 -> 독립된 국가로서의 주권행사영역(영토조항) 신설

(참고) 남의 규정 : 경계의 대상(적대적 관계)이자 화해협력의 대상(통일의 동반자)

- 남북간 호칭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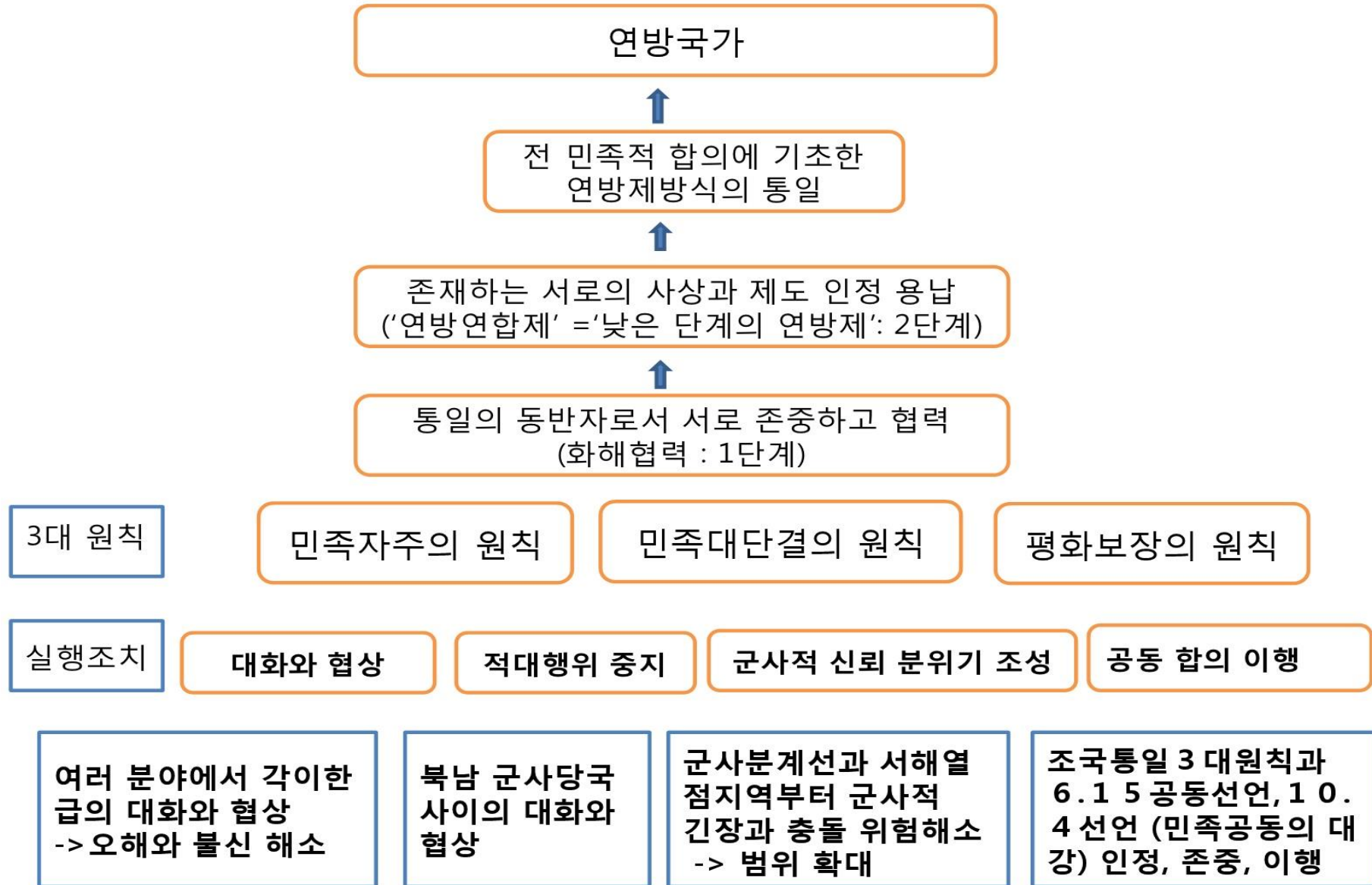
① 북괴 VS 괴뢰, 정부 VS 정권 / 남한 VS 북한, 남조선 VS 북조선 (헌법적 규정)

② 북측 VS 남측 / 북녘 VS 남녘 / 북반부(이북) VS 남반부(이남)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관계법률적 규정)

③ 대한민국(ROK) V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유엔, 국제적 규정)

4-3) 김정은집권 1기 북한의 통일노선과 방안 -2016년 5월 조선노동당 7차대회에서 제시

4.27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회담



4-4) 김정은집권 2기의 통일방안 -> 한반도 평화환경론

1) 2016년 조선노동당 7차대회에서 70년대에 정립된 조국통일의 평화적 이행과 비평화적 이행 방식 다시 언급

① 평화적 이행 :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통일의 동반자로서 함께 손잡고 관계개선과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자" (교류협력관계 -> 연방연합제)

② 비평화적 이행 : "남조선당국이 천만부당한 《제도통일》을 고집하면서 끝끝내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반통일세력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며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할 것"

-> 평화적 이행 촉구하는 압박용으로 비평화적 이행의 길 언급

2) '적대적 교전국' 규정에 입각한 통일방안 (논리적, 개념적 차원) → **힘에 의한 평화적 환경 조성 : '강 대 최강' 대응 표방**

① 평화적 이행 : "공화국의 민족력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자체를 완전히 제거"
(전망 : 평화적 환경 조성 and 체제경쟁 -> 대한민국의 인식 전환 -> 두 국가간 교류 -> 연방연합제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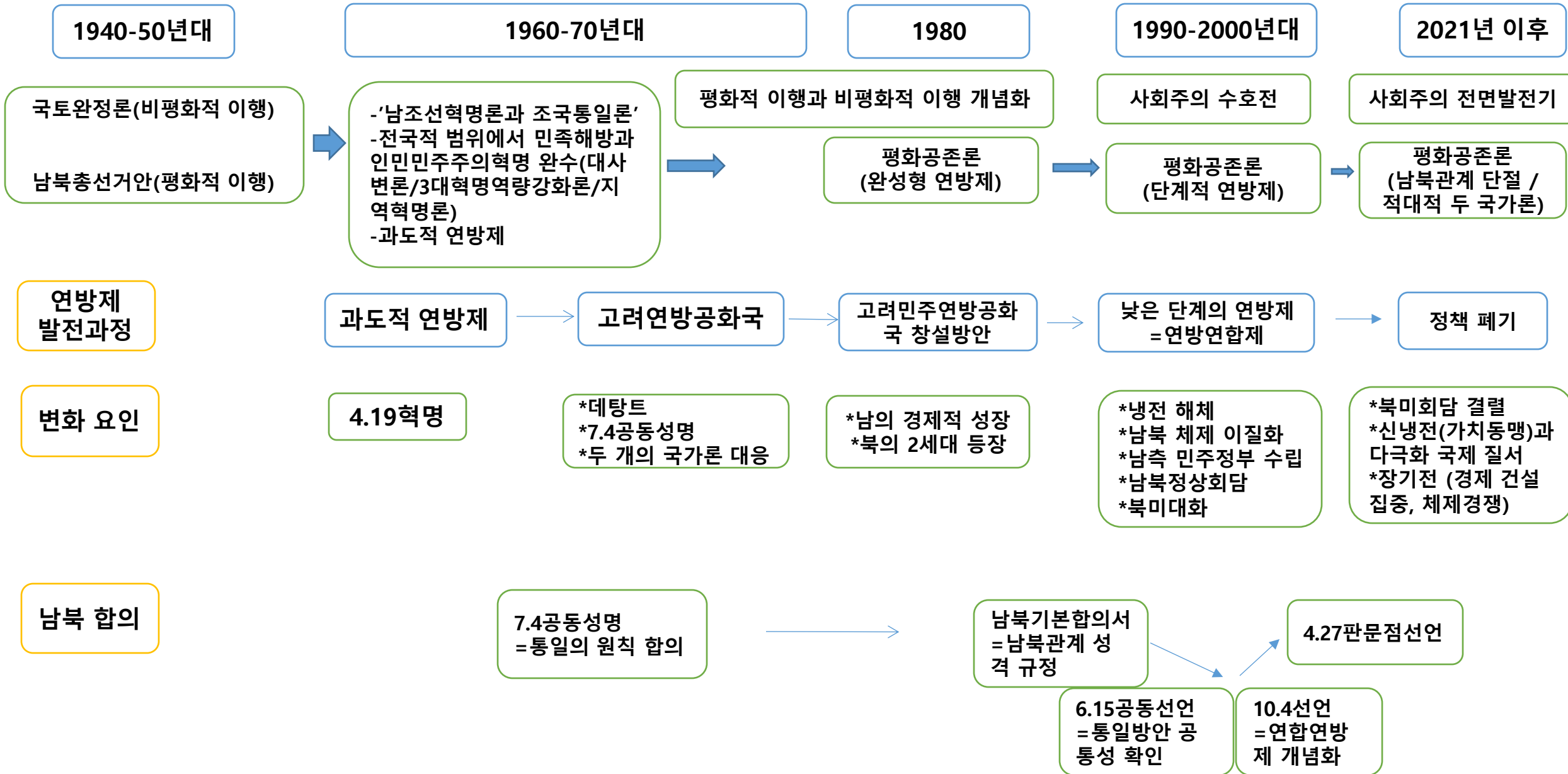
② 비평화적 이행 :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튀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원수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

-> 선제적 아닌 전쟁 발발 상황을 가정한 수사

-> 유사시 대한민국을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영역에 **편입** 언급

-> 김정은 총비서는 2023년 8월 29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훈련지휘소를 시찰하면서 "남반부 전 령토를 **점령**하는 데 총적 목표를 둔 (중략) 각급 대연합부대, 연합부대 참모부들의 작전계획 전투문건들"과 "총참모부의 실제적인 작전계획 문건들"을 검토

참고) 연방제 통일방안 변화과정



4-5) 우리국가제일주의와 민족문제 인식 변화

-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인민의 이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2021년 개정된 당 규약)
- “조선로동당은 전조선의 **애국적민주력량과의 통일 전선을 강화**하며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 열의를 불러일으켜 조국의 통일발전과 룡성번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한다.”
-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 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며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노선 폐기, △'적화통일' 의지 포기, △'통일' 보다 '평화공존' 모색, △'두개 조선'(Two Korea) 지향 등으로 해석

- “국가방위력도 분단과 전쟁의 원흉인 외세의 최후발악을 봉쇄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며 통일을 앞당기는 현실적인 힘” /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또한 **국력과 국력의 대결**”

=>군력에 의한 민족문제 해결 의도 표현

->통일 3대원칙 유지(8차당대회) -> 남북관계 새로운 규정으로 가는 과도기 ->2023년 12월 3대 원칙 폐기

5. 대남전략의 변화 요인

1) 정세적 요인 :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 최고지도자의 권위 훼손 / 실리론의 약화와 원칙론 강화

2) 내부적 요인 : 시대성격 규정 변화 / 사회주의 전면 발전 추구 / 세대교체 / 사회 통제 강화

3) 외부적 요인 : 국제질서의 다극화 / 대미 장기전/ 노무현 · 문재인 정부 재평가/남한 사회 현실 인정

5-1. 대남전략 전환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대내적 요인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수립

하노이회담 결렬 후
대남 강경파 득세

통일전선부 위상 약화

신세대의 의식 변화
(사회주의민족 vs 자본주의민족)

사회통제 강화

대외적 요인

하노이회담 결렬
->수령의 권위 훼손

미국 패권의 약화 /
국제질서의 다각화

러-우전쟁
러시아, 중국 우선의 외교 전환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

남북관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재평가
->'진보정부'의 한계

적대적 분단의 구조적 현실
인정

연합과 연방의 공통점에 대한
회의감
->연방제의 논리적 맹점 인식

통일전선적 요인

통일전선사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재평가

남의 '민주역량'에 대한 현실적
인식과 평가
->장기간에 걸친 논쟁

독자적 연합세력 부재
->'남조선혁명론' 폐기

5-2) 세대교체와 사회통제 강화 ->북한 MZ세대의 민족, 통일의식 변화

1) 세대교체와 북한의 고민

- : 고난의 행군과 디지털문화 확산으로 세대간 단절 심화
-> '백두산대학' 과 민족전통문화, 사회주의 생활기풍 강조
- : 실력과 경험 부족 -> 실력전과 전민과학기술 인재화 강조.
- : 이전 세대의 기득권 해체 :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척결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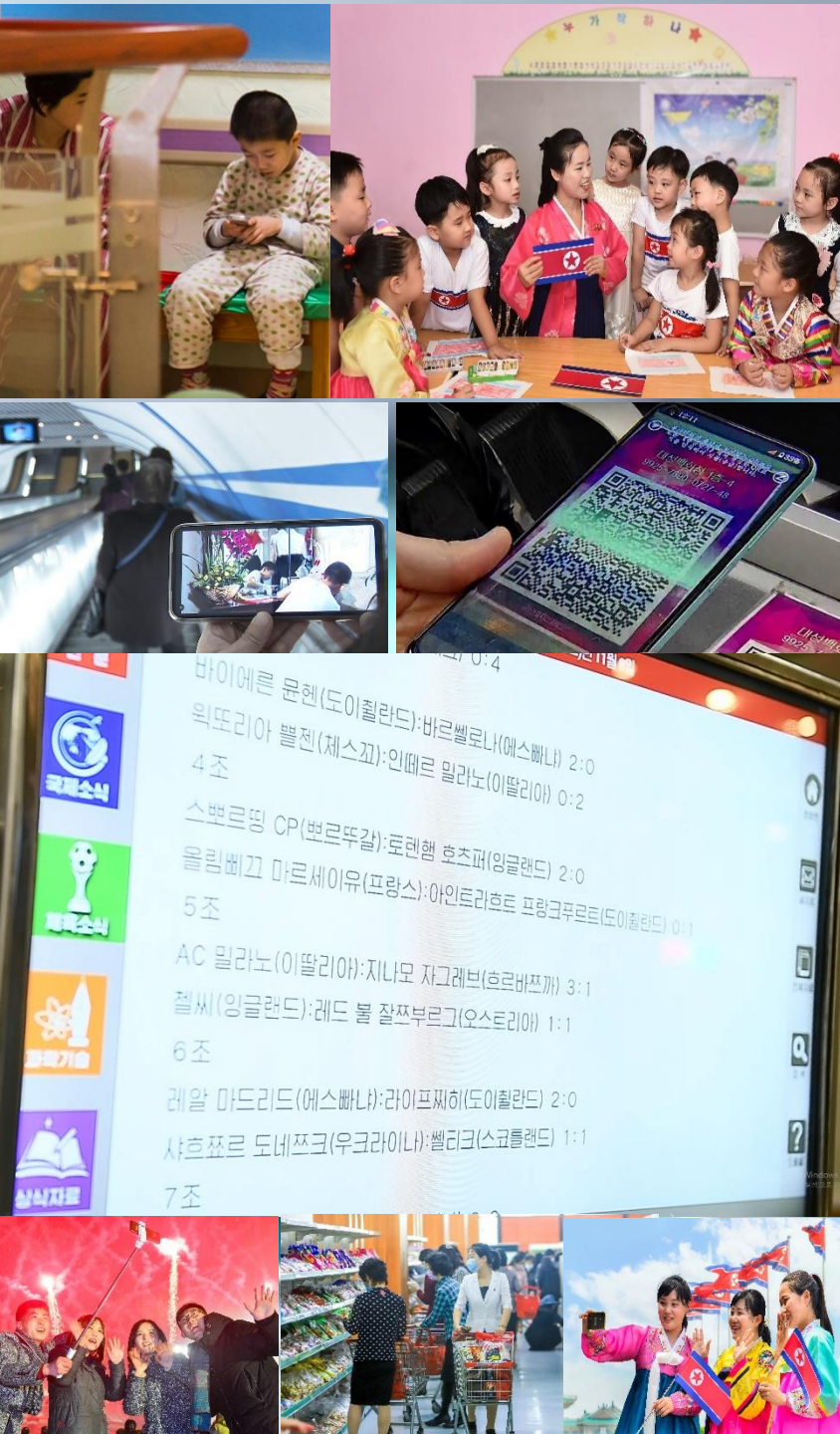
2) 혁명가후비육성사상 / 청년중시사상

- : 혁명학원 사업 개선을 통한 핵심골간 후비 육성
- : 혁명학원들을 교수, 교양에서 전국의 본보기 학교, 다른 교육단위가 따라배우는 학교 위의 학교로 육성
- : 소년단원들을 '지덕체를 갖춘 유능한 혁명인재로 준비'할 것을 목표로 제시, 애국심 교양 강조

3) 사회주의 통제 강화 법제화 -사회주의 발전단계에 따른 사상 재정립/외부사조 차단/대외교류 준비

- :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 / 평양문화어보호법(2023)
- > 청년들의 사회주의 생활양식 확립을 위한 원칙 제시
- > 반동적인 사상문화,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류입, 류포 행위 처벌 규정
- > 사회주의 준법기풍 확립 강조
- > 당에 규율조사부와 법무부 신설

고난의 행군 이후 세대 / 2009년 이후 세대



발전전략 논쟁
 개혁개방 VS 자력갱생
 중국 VS 미국
 시장 활용 VS 통제
 전략국가 이후 사회주의
 전망

MZ세대
 시장/개혁개방/디지털
 핵보유 / 자부심과 박탈감
 경험 부재 / 실력 부족
 세대 갈등 / 단절과 계승

노선전환
 김정은주의 / 3대혁명
 사회 재구조화/ 당근과 채찍
 기득권의 해체와 전환
 체제경쟁의 본격화



6. 한반도 문제와 남북관계 전망

1) 적대적 작용과 반작용(action and reaction)의 남북 관계 지속 : 남과 북 모두 '힘에 의한 평화' 추구

2) 9.19군사합의 폐기 → MDL, NLL 일대 포사격, 군사훈련 정상화→ 한반도 위기 지수 점증

3) 북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및 실전 배치 → 남은 확장억제(핵우산)와 독자 핵 보유 선택 기로 직면 가능성

4) 북미관계 정상화 때까지 남북 대화 및 교류 단절 지속 → 북의 구상대로라면 2036년까지 지속 가능성

6-1) 대남전략 전환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

1) 남북기본합의서 이전으로의 회귀 (체제위기로 인한 수세적 대응)

- "북한이 지금 군사적 위협을 통해 노리는 것은 한반도를 **중동처럼 상시적 군사분쟁지역화** 하려는 것"
- "변화된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에 맞게 **헌법적 가치를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통일방안**이 새롭게 모색돼야 한다"
-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통일로 가는 튼튼한 초석이 될 것"
- "북한의 '노선 변경'이 김일성·김정일 선대로부터 이어진 방침을 뒤집은 것이며 세습 권력의 기반이 되는 것들을 허물고 있는데, 그렇다면 **북한 내부의 이념적 공백·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대통령 : "(북한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세력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을 가할 때도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결론을 낼 수도 있는 세력이란 걸 전제로 준비해야 한다." (2024.2.8. KBS 특별대담)
-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 완성 : 1단계 화해협력이 아닌 북한의 정상화(인권, 자유, 시장 확산)로 변경 모색**

2) 북한이 전쟁을 결심했다는 주장

- "헤어질 결심"이 아닌 "전쟁할 결심" (밥 칼린, 해커...) / 통일대전
- 우발전 충돌 또는 국지전 도발 -> 핵 위협

3) 체제경쟁 선언

-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라는 김여정 담화의 의미

- 1970년 박정희의 '8.15평화통일구상선언' 연상

4) 1950-60년대 동독의 두 국가론과 유사

6-2) 높아진 한반도 위기 지수 - 북의 언술 : 한반도는 더 위험해졌나?

1) 1968년 푸에블로호사건 후 원산항 폭격론



1년 간 북미간 직접 송환협상

2) 1994년 미국의 영변핵시설 정밀타격 방안



남북정상회담 합의
북미 간 제네바핵합의

3) 2017년 북한과 미국의 핵 단추 논전



남북정상회담
북미 첫 정상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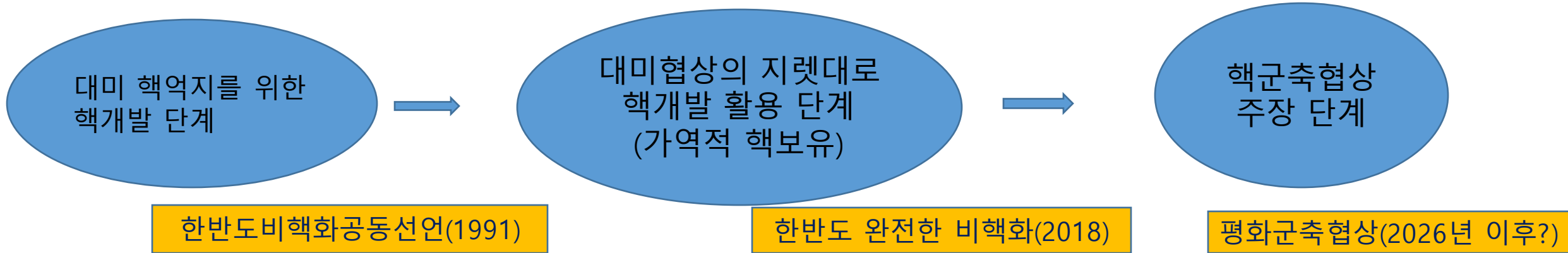
4) 2023년 북한의 전쟁 준비 발언 / 핵 고도화



장기적 국면 전망

북 : 강 대 최강 대응 / 남 :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하에 응징 표방

6-3) 멀어지는 한반도비핵화 문제



◇ 북, 2019년 2월 하노이회담 결렬 후 "최상의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 것" 이라고 선언

◇ 장기전, 정면돌파전 선언 (정책 방향) : 2021년 1월 8차당대회까지는 '새로운 길' 유보 (코로나사태 등)

◇ 러-우크라이나전쟁 이후 2023년부터 새로운 해법 모색 => 핵과 미사일(투발수단) 개발 고도화

◇ 미국 내 비핵화 협상 '중단 단계' 모색 / 평화군축협상 논란 확대 전망



7. 대응방향

1)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한반도 위기구조, 변화된 북한의 노선에 대한 객관적 인식 필요

2) 단기적으로 서해 NLL 지역의 군사적 충돌, 확산 방지, 평화적 관리 중요

3)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필요 (종전선언 / 평화협정 / 다자간 한반도 평화 보장 체계)

4) 민간 평화운동, 통일운동의 재정립 →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의 독자성 확보, 장기적 전망 필요

7-1) 북한의 국제정세관과 한반도 상황 인식, 내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새로운 인식들 필요

- 민족문제에 대한 북한의 근본적 사고 전환에 대응해 새로운 남북관계 틀 고려
 - > 정확한 진단과 인식이 있어야 합리적인 대응 방안 도출 가능
- 북의 한반도 정세관은 '신냉전' 이 아니라 전쟁이 일시 멈춘 '정전' 상태이지만, 언제라도 교전 상태, '열전' 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인식
- 김정은 위원장의 '전쟁' 발언은 2국가론에 따른 것으로, 현 남북관계가 정전체제에 있는 '국제법적으로 전쟁 상태' 라는 점을 최강의 수준에서 표현한 것.
 - > 미 국방부의 '핵태세보고서(NPR)' 에 나온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을 것' 이라는 경고와 유사

⇒북은 결별 이후 평화적 환경이 조성되면 다시 연방제 방식 통일방안으로 복귀할 것인가?

7-2) 경제건설을 위한 북한의 군사, 군수분야 변화 양상

1. 군 복무기간 단축

- 2021년 인민군 보병의 복구기간을 2년 단축 (약 10만-20만명 감축)
- 건설, 농촌, 탄광 등에 제대군인 3년간 의무 근무 / 청년돌격대 확대

2. 재래식무기 생산 감소 / 민수 생산

- 2016년 이후 전차, 탱크 등 재래식 무기 생산 정체
- 군수분야에서 농기계, 의료와 건설기계, 인민소비품 등 민수용품 생산 증가 / 제2경제위원회(군수공업) 위원장에 트랙터공장 지배인 기용

3. 전쟁예비물자 활용

- 국가적 건설사업, 수해 등 재해상황 때 예비식량 공급 ->시장 가격 조절

4. 군 시설 민수 전환

- 함경북도 경성군 중평온실농장, 함경남도 함주군 연포온실농장, 평양시 강동온실농장 등 과거 군 비행장 자리에 건설 / 원산갈마국제공항

5. 기술 이전

- 국방공업 기술의 민수 공장 이전, 활용 (예, 희천현하기계종합공장의 CNC기술과 설비를 전국 현대화 공장에 보급)

7-3) 서해 충돌 방지, 관리 중요

- 남북기본합의와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폐기
- 현재 조성된 상황에서 북이 헌법에 영토조항을 추가해 서해 해상경계선 이북을 영토로 규정할 경우 남과 북의 충돌 가능성 점증

- '한반도 화약고' / '서해 열점지역'

- 북방한계선(NLL)과 '서해 경비계선' (국제법상 12해리 등거리 원칙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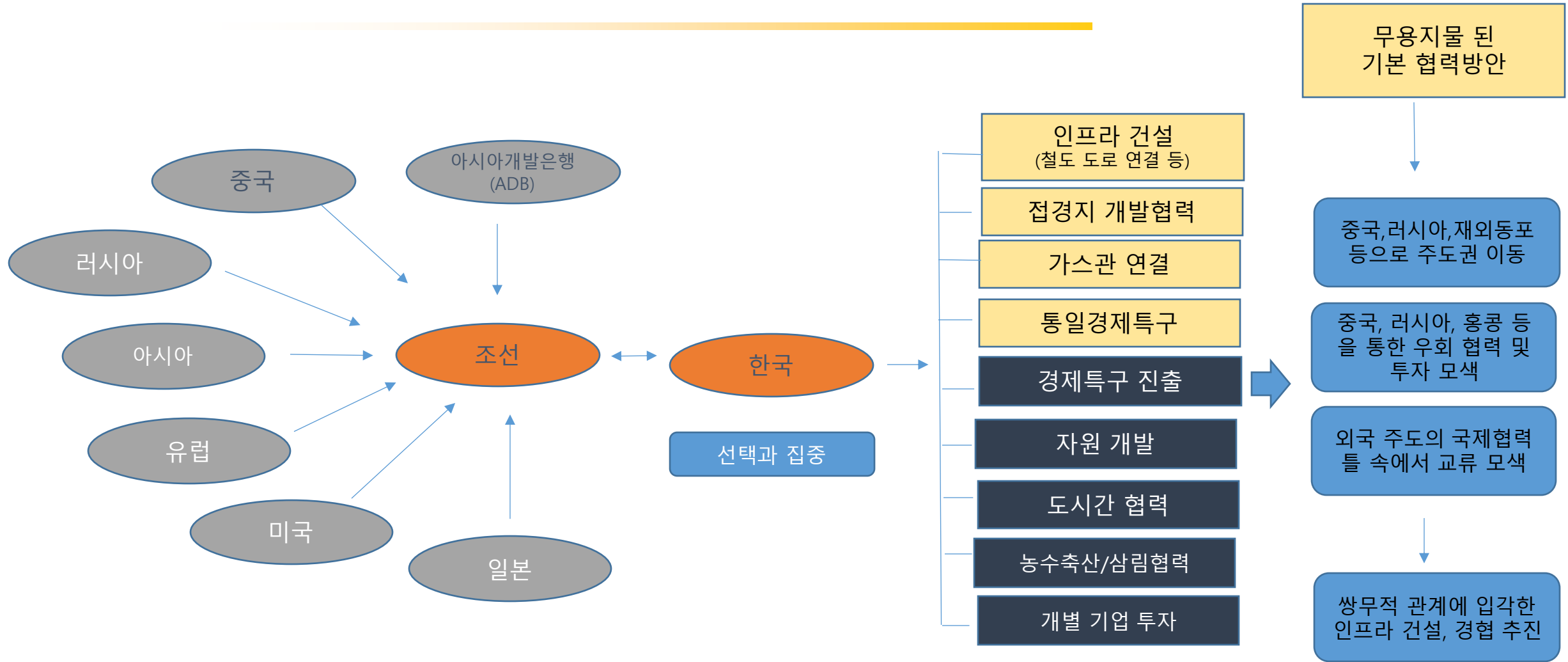
-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령공·령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 (시정연설)

• 국방부 : "NLL은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 NLL을 지키고 수호하겠다는 것은 우리 군의 확고한 입장이다."

- 상시적인 충돌과 갈등의 일상화 위험



7-4) 대북경제제재 해제 이후를 상정한 기존 남북교류와 경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색 필요



북한의 러시아, 중국 등 외교 강화

◇ 러시아, 중국과 정치, 외교, 군사 분야의 전략적 소통 강화

- 북,중,러는 '동상이몽' 이라고 하더라도 정치, 군사, 국제 분야에서 협력 수요 높은 상황.
- 중국, 러시아 연합군사훈련 규모 확대
- "양국은 미국 및 그 동맹국의 군사 영역에서의 위협 행동과 북한과의 대결 및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무장 충돌 도발로 한반도 형세의 긴장을 격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5월 16일 중러 정상회담 공동성명)



◇ 북, 중, 러, 연해주+길림성+나선특구를 연결하는 국제경제협력권 추진

- 러시아에 이어 중국의 북한 항구 활용 구체화(청진항), 창항출해(創港出海, 항구를 확보해 바다로 나간다) 전략
- "중국 선박이 두만강 하류를 통해 바다로 나가 항해하는 사안에 관해 조선과 '건설적 대화'를 진행하는 것을 지지한다" (5월 16일 중러정상회담 공동성명)



◇ 북-러 : 군사, 과학기술, 물류(철도 등), 관광, 농업, 문화, 교육, 체육 등 전반 교류 정상화

- 푸틴 대통령 방북 준비 : 정세 완화 필요성

◇ 북-중 : 지역협력, 문화, 관광, 자원 수출 논의

- 신압록강대교 가을 개통식 전망 / 금강산과 원산갈마지구 투자 논의
- 북중 정상회담은 북중 간 '잠재된 현안' 합의돼야 성사 가능성



=> 북은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틀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교류확대에 따라 경제, 문화 개방 확대 전망

7-5) 평화, 통일 의식 제고

북한에 대한 남한 젊은 세대(MZ)의 이미지

1) 폐쇄적 독재 국가 (상)

2) 주적, 경계대상 (전쟁 위협 국가) (상)

3) 무관심 : 재미로 북한의 이미지를 소비 (중)

4) 동포, 같은 민족, 다른 사회 (중)



통일 인식

적극적인 흡수통일론 성향: (하)
북한 정권과 체제 붕괴 추구

현실적 손실계산 성향: (중)
통일은 손해, 비현실적 비합리적

통일 유보 성향 : (중)
통일 없는 평화와 교류 지향

적극적 실리 성향 : (상)
통일 편익 고려, 점진적 통일 과정론